



2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창조관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 시대 도약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정동영 국회의원,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광형 전 KAIST 총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피지컬 시 대도약' 총력 결집

전북대에서 결의대회 개최... 민·관·학·정 '한마음 한 뜻'
정부 5급 3특·현대차 새만금 투자 연계 산업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급3특' 성장전략에서 첨단로봇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확보한 데 이어, 민·관·학·정의 역량을 한데 모아 피지컬 시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2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창조관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 시 대도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같은 날 열린 제10회 중

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북의 '첨단로봇 파운드리'가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확정된 가운데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연결해 피지컬 시의 연구 개발과 제조, 실증·인증까지 아우르는 국가 핵심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

상이다. 행사에는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 통일부장관 겸임)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도내 시·군 단체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주요 산업계와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미래산업의 새로운 출발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이광형 전 KAIST 총장의 특별강연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으로 시작해 전북의 미래 비전 제시와 공동 결의문 낭독, 대도약 선포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전북대 창조관

에 구축된 피지컬 시 실증랩을 둘러보며 전북의 산업·연구 기반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금 전북은 현대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제조 피지컬 시 국가 프로젝트 주도 등 미래 100년을 바꿀 산업 대전환의 결정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전북자치도는 도내 시·군, 대학, 기업, 정치권과 굳건히 연대해 피지컬 시와 수소·로봇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①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의 전략적 유치와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에 가져오겠다'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특별자치도청 남문에서 전개된 100만 도민 서명캠페인에 참여해 서명을 하고 있다.



②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도민주권위원회가 26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의 뭉을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 뭉, 이번엔 반드시 가져오겠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도민주권위 출범
100만 전북자치도민 서명운동도 전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의 전략적 유치와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도민주권위원회'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도민주권위원회(상임공동대표 신형식) 소속 회원 50여 명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의 뭉을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인구 구조를 바꾸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이 이미 갖추고 있는 국가 기관과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을 집중하는 산업 연계형 이전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완주를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산운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북 혁신도시와 익산을 농촌진흥청·국가식품플랫폼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농생명·바이오·식품 산업 거점으로 강화하며 △새만금·

군산을 첨단 제조와 이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한 제2차 공공기관 및 미래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북이 공공기관 이전을 수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전북의 직원 이주율은 77.8% 6,040명으로 전국 3위, 가족 동반 이주를 역시 72.1% 3,368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한 만큼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직원과 가족의 정착까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역 간 나눠먹기 방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산업 연계성, 국가균형발전 효과, 정주 여건,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북 정치권을 향해서도 시·군별 개별 유치 경쟁을 넘어 전북 전체의 산업 지도를 고려한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핵심 유치기관 선정과 유치 논리 개발, 도민 공론화 중앙정부 및 국회 건의, 이전 대상 기관 방문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위원회에는 전북발전연합회(회장 최현양)와 여성비전포럼(대표 박정희), 전주여성농민회(대표 최이순), 임실농촌주민주권운동본부(본부장 강민호), 구이농협 조합원(조합장 최만열), 전주농협 감태연 감사, 전 전북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등 도내 여러 단체와 전북 발전을 위한 양식 있는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자회견 이후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유치를 위한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형식 상임공동대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의 산업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요구하고 설득하고 행동해서 전북의 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치열하게 준비하고 요구해야 한다"며 "전북의 뭉을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연구단체
정원문화 연구회 발족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원문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8월 2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정원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수 정원 탐방을 통해 지역 특화 정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로, 김한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조용수·오창숙·손종열·노현이 의원이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 국보로 지정된 남원 관현루원을 중심으로 한 한파우, 요천 수변공원과 조성 중인 민인공원 등 관내 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비롯한 우수 정원 탐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다. 김한수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타 지역의 좋은 정원문화를 남원시에 접목함과 동시에 관내 유 휴지를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로·산재의료 예타 최종 선정 전북 숙원사업 잇따라 '청신호'

민주 안호영 의원, 환영 표명

국도 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와 국도 37호선 무주 설천 삼곡~두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전북 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잇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42개 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의 통과를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예타를 통과한 전북 지역 사업은 △남원 인월~산내 국지도 80호선 △무주 설천 삼곡~두길 국도 37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26호선 △전주 도도~김제 공덕 국도 21호선 △김제 공덕~군산 대야 국도 21호선 등 5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안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에서는 국도 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 2.4km 구간과 국도 37호선 무주 설천 삼곡~두길 8.4km 구간이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2,063억원 규모다.

두 사업은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 전북 동부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돼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안 의원은 국도교통부 장관·차관과 도로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



가 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30일에는 박훈기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전북 지역 국도·국지도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국가 계획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지역 숙원사업이 중요한 판문을 넘었다"며 "앞으로 국가 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 예산 확보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쟁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익산에 산업재해 전담 병원을 건립해 전북과 충남 서남부권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직접 방문해 전북 지역의 산재 전문병원과 재활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재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안 의원은 "오래 걸렸지만 도로부터 산재 의료까지 전북의 숙원사업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며 "산재병원 역시 예타 통과를 거쳐 실제 건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 있게 쟁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제3 금융중심지로”

민주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을 통해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자산운용 관련 핵심기관의 전북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만큼 금융·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집중 배치해 금융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전북이 또다시 소외되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를 전북의 핵심 유치기관으로 제시하고, '제2차 공공기



관 이전 전북 우선이전 정책요수서'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경제·금융 분야 핵심 기관까지 함께 이전에 협력체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작년 11월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통합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양질의 금융기관을 전북에 유치해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의 정당한 뭉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10명에 위촉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김희수)는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3대 전반기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민간단체 등 각 분야의 외부위원 8명과 도의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준철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필요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희수 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쌓으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과 아낌없는 조언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과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이 직접 출장 목적과 필요성, 세부 일정, 방문기관 및 기대효과 등



을 직접 제언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심사위원회는 안전 2건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기결하였다.

위원들은 특히 △방문기관별 면담 대상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주요 논의 의제를 구체화하고 기관 섭외를 조속히 확정할 것 △의원과 수행 직원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여비 지급기준과 산정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 △연수 주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집행기관 관계부서가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일 것 △출장 후 결과보고서가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언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